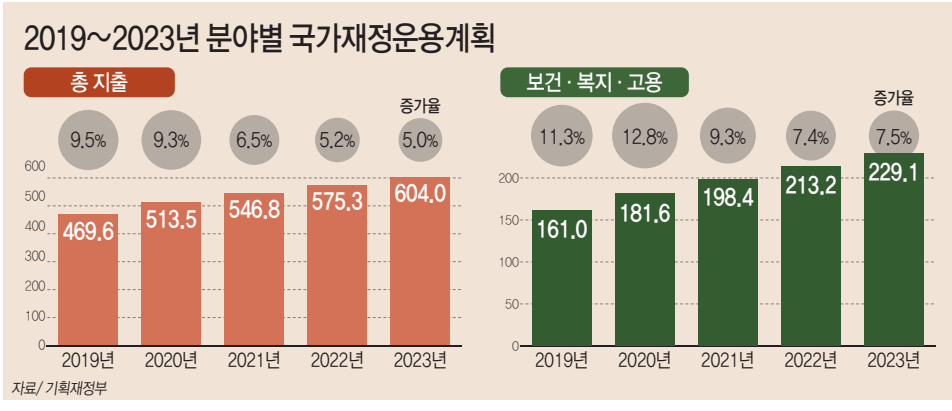
커지는 국민세금 부담… "저출산·고령화정책 분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재원배분 필요"
정부 복지 정책, 고비용·저효율
학계 "재정조달계획 마련해야"



/유토이미지

복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상호 분리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 지적이 나왔다.

제도·모형 개선으로 정책 추진력은 높이고, 재원 낭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경우 "재정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취합·정리했기 때문에 상호 간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투입 예산도 각 부처의 사업예산을 중복해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고언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3대 분야(저출산·고령화·대응기반) 194개 과제로 구성하면서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 정합성이 낮고,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존 부처별 개별 추진 사업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새 사업을 설계해 종합적으로 출범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가)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을 뒀다"며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면 노인인구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소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들어서야 정책 지침·방향 부합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했고, 과제 수도 대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고비용·저효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 161조원보다 12.8% 늘린 181조6000억원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198조4000억원, 2022년에는 213조2000억원, 2023년에는 229조1000억원까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연 평균 9.2%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재정수입 감소 등 세수 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예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학계에선 준칙·계획 마련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올랐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 부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처리"vs"조국퇴진"… 여야정쟁치열

이언주 이어 황교안 삭발
野 "여권의 책임론" 주장

추석 연휴가 끝나자 여야가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6일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다"며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야권에 정쟁 중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을 두고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며 여권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 장관 지키기에만 매달렸다"며 "정상적 국정이 붕괴됐다"고 갈등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진행했다.

야권의 항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11일 삭발을 단행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석대성 기자

"대통령 휴가지 '저도'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별장과 군사기지가 있어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猪島)가 47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국방부는 16일 행정안전부, 해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 5개 기관이 함께 저도를 1년간 시범개방 한다고 밝혔다.

저도의 시범개방 기간은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도 개방은 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통령 공약 이행사례다. 관계기관들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m@

아직도 '트럭기소?'… 형사소송 전자화 촉구

형사전자소송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권 제한·기록 보존 한계 지적
방대한 기록에 '트럭기소' 신조어도

그간 종이로 진행돼 왔던 형사소송을 전자화 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형사소송이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정성민 사법 정책연구원은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소송도입 도입 단계로 ▲법원작성 문서의 전자화 ▲전자문서 제출 허용 ▲검사의 법원제출 문서 전자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형사전자소송 도입 입법방안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특별법(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류부곤 경찰대 교수 역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전자문서의 정의, 기존 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가져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많고 서증에 대한 증거법의 부분에서도 진술증거인 저자문서의 경우 문언해석의 한계상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있으므로 한계와 실무계가 전자소송을 염두에 둔 전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기록 보존의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국외대 재학생 항의로 '욱일기 문양 포장 음료' 생산 중단

폴란드어과 4학년 조중희씨 공론화

한 대학생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를 포장 디자인에 사용한 폴란드 주스 회사 제품의 생산 중단을 이끌어내 화제다.

16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주인공은 한국외대 폴란드어과 4학년 조중희 씨다.

조 씨는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며 폴란드에 체류 중 지난 8월 포장 용기 디자인에 욱일기가 사용된 주스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식료품 회자인 호르텍스(Hortex)가 생산한 이 제품은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의 도안과 함께 욱일기 문양이 포장 디자인에 사용됐다.

이에 조 씨는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폴란드인 친구와 함께 호르텍스 본사에 즉시 항의 메일을 보냈다.

조 씨 등은 항의 메일에서 "욱일기 문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전쟁 범죄와 더불어,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제국주의 상징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나치 독일의 하겐크로이츠 문양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폴란드인들이 느끼게 될 고통과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회사 측에 욱일기 문양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조 씨는 호르텍스 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이 사안을 공론화했고, 이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됐다.

이후 호르텍스 측은 지난 9일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패키지로 제작된 '일본 맛' 음료의 생산을 전격 중단하겠다는 메일을 조 씨에게 보냈다. /한용수 기자 hys@